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글 · 박래군 laegoon@hanmail.net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 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이 땅 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가장 멀리까지 울려 퍼질 재앙 중의 재앙을 준비했다는 것을.”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중에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지난해 11월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서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가는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사건 발생 16년 6개월 만에 너무도 상식적인 진실의 일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당시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그들이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립과학수사연

“

강기훈, 같은 운동단체에서 한 사무실을 쓰며 같이 운동하던 동료가 자살을 하는 것을 유서를 대필해주며 방조하였다는 패륜아로 몰렸던 장본인이다. 강기훈과 함께 1991년 5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당시의 민주화 운동진영은 혁명과 운동을 위해서는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패륜집단이라는 법적인 판정을 뒤집어써야 했다.

”

연구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당시의 감정은 김형영 당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혼자 한 것이었고, 공동감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일종의 ‘고백’을 했다. 거기에는 7곳의 사실 감정소 감정 결과도 유서는 김기설의 필적이며, 강기훈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강기훈, 같은 운동단체에서 한 사무실을 쓰며 같이 운동하던 동료가 자살을 하는 것을 유서를 대필해주며 방조하였다는 패륜아로 몰렸던 장본인이다. 강기훈과 함께 1991년 5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당시의 민주화 운동진영은 혁명과 운동을 위해서는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패륜집단이라는 법적인 판정을 뒤집어써야 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서대필 조작사건’, 드레퓌스는 12년 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규명과 강기훈의 명예회복 투쟁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처참했던 1991년 5월

강기훈의 동료 김기설이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한 것은 1991년 5월 8일 오전 8시 7분경이었다. 그해 4월 26일 명지대 새내기 강경대가 학교 시위에 참가했다가 학교 앞에서 백골단(사복체포조)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뒤, 전남대생 박승희가 분신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연이어 안동대 김영균, 경원대 천세용 학생이 노태우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분신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던 박창수 씨가 안양병원에서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5월 6일이었다.

학생과 노동자의 연이은 목숨을 건 항거와 의문사는 노태우 정권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런 죽음의 행렬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불러온 김기설의 분신으로 이어졌고 이후에도 노동자와 학생들이 계속 분신하였다. 5월 25일 성균관대 김귀정 학생이 범국민대회에 나갔다가 경찰의 토끼몰이 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60일 동안 분신, 투신,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모두 13명에 이르렀다.

그 참혹했던 5월의 한 복판에서 당시의 민주화운동세력들은 ‘고 강경대 열사 살인 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로 결집했다. 노태우 정권은 6월항쟁 이후 분출하던 민주화운동, 노동자 등의 생존권 확보투쟁 등에 대해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탄압으로 대처하면서 5공 청산과 5월 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억누르려고 했다. 1991년 5월의 저항은 이런 노태우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적 정책과 탄압에 대한 저항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강경대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자 절박한 상황 인식이 운동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런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획이 정권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니 그것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신이 이어지자 보수 세력 사이에서는 운동권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분신자를 선택한다느니, 배후가 있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5월 5일 시인 김지하는 조선일보에 “죽음의 굶판을 당장 집어치워라!”면서 분신을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마침 김기설 씨가 5월 8일 아침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한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홍 서강대 총장(신부인 그는 이후 ‘김정일 장학생 발언’ 등을 하며 운동세력을 친북세력으로 몰아가는데 크게 기여한다.)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성경에 손을 얹고는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려는 반생명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 죽음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검찰은 “분신자살은 2~3일 간격으로 연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는 등 방법이 유사하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영남, 경기, 서울 등 분포를 이루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



“
1991년 5월의 저항은 이런
노태우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적 정책과 탄압에
대한 저항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강경대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자 절박한
상황인식이 운동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런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획이 정권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니
그것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겠다고 밝힌다.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은 전재기 서울지검장, 강신욱 강력부 부장 검사 등 6명으로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여 김기설의 분신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상황을 극대화시킨 것은 당시 언론들이었다. 언론들은 이런 의혹 제기를 확대하여 기사로 써댔다.

검찰의 예단, 강기훈을 배후로 지목하다

“1991년 4월 27일 경부터 같은 해 5월 8일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 …… 고등학교 1학년울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 …… 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위 인용문은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의 일부다. 김기설 씨가 분신하기 하루 전인 5월 7일 청와대 고위 당정회의와 그의 분신 당일인 5월 8일 오전 7시에 있었던 청와대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분신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마침 발생한 김기설 씨의 분신 사건은 검찰에게는 분신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분신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소재가 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公安부서에 배정하지 않고, 마약범들을 잡아들이던 서울지검 강력부에 담당하게 한다. 이로부터 검찰은 이전까지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주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검찰 공화국’의 서막이 이로부터 열리고 있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필적을 확보하기 위해 김 씨의 주민등록상 집(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이나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필적을 입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검찰의 태도는 김 씨의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예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검찰은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국 업무일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고, 그 결과 국과수는 강씨가 작성한 것으로 감정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업무일지를 조작하기 위해 유서를 대필한 자가 급하게 써 내려갔다.”고 강 씨를 추궁하게 된다. 그런데 강기훈 씨는 이 업무일지가 김기설, 임무영, 이동진 씨 등 세 사람의 전민련 활동가들이 작성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은 수사방향을 급선회하여 임무영 씨를 체포, 7월 6일부터 9일까지 잠 안 재우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집중 추궁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그러자 7월 9일부터 강 씨에게 다시 유서를 대필했음을 자백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검찰이 강 씨를 유서 대필자로 몰아가는 데는 1991년 5월 투쟁에 찬물을 붓기 위해 엄연한 사실마저 무시한 채 조작한 것이었다.

진실을 강압으로 차단한 검찰

진실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검찰이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운 홍 씨의 경우 1991년 5월 13일 연행된 이후 15일 밤 검찰 수사관과 집에 잠깐 들린 시간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0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압과 협박’으로 홍 씨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 그런 뒤에 곧바로 재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홍 씨의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놓고 그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한 달 이상을 검찰 보호 아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재판 전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많아 후일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 홍 씨는 1993년 10월 11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했다.”고 폭로하면서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압력으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사건은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1992년 2월 17일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것이었다. 그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라며 수사 개시 6일 만에 서둘러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기훈 씨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였다. 전력도 있고 당장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했던 것인데 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억지는 그대로 2심 재판부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이런 뒤에도 한겨레신문이 감정을 의뢰한 사설 감정원을 압수수색하였고, 1993년 10월 23일자로 방영 예정이었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SBS의 이 프로그램은 1998년에서야 방영할 수 있었다.

범죄자는 강기훈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다

법원은 이런 강압, 왜곡수사를 벌였던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강기훈 씨의 자살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는 박만호(주심), 김상원, 박우동, 윤영철 재판관으로 이루어졌고, 이중 윤영철 재판관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인물이다.

1992년 7월 24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강 씨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인정, “자살방조죄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며 “피고인(강기훈)의 경우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

“

그런데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사건은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1992년 2월 17일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것이었다. 그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라며 수사 개시 6일 만에 서둘러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기훈 씨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였다. 전력도 있고 당장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했던 것인데 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억지는 그대로 2심 재판부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자회견장에서의 강기훈 씨.

루어진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을 환기시키고, 강신욱 대법관과 관련 검사들의 승진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런 모든 노력의 끝에 지난 2006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13일 진실의 일부일 뿐이지만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다는 상식의 승리를 얻어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 진실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후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드레퓌스 사건 12년의 몇 배만큼 길어지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박래군*

글 박래군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자료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도운 것이 명백하므로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정신적인 자살방조’를 처음 인정하였다는 대법원의 이 판결로 1년 1개월 동안 ‘공권력의 권위’와 ‘운동권의 도덕’의 대결은 공권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당시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1992년 7월 24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선포한 날로서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정권의 주구로 전락한 법원의 판결이 강기훈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소리 높여 외친다. 강기훈은 무죄이다!”라고 강조했다.

‘드레퓌스 사건’처럼 끝내 승리할 진실

지난 16년 6개월 동안 무죄석방공대위, 진상규명공대위를 구성하여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했고, 2005년 3월에는 현재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무죄석방공대위에서는 수사, 공판자료와 진실규명과 관련한 활동, 언론보도 기사 등을 모아서 각권 900쪽 전후의 전 3권으로 이